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연 구 책 임 자 **안외순** | 한서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원 **박성호** | 충남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서봉균 |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다현 | 공주대학교 지역교육정책개발원 연구교수

연구수행기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연구용역 과제로 제출되었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 방법 ····· 6
Ⅱ. 민주시민교육 현황 ····· 9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 11
2.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 동향과 정책 추진 현황 ····· 14
1) 중앙정부와 국회의 추진 현황 ····· 14
2) 지방정부의 추진현황 ····· 17
3) 전국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 현황 ····· 20
3.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황 ····· 21
1) 충남 정부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개황 ····· 21
2) 충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동 현황 ····· 26
Ⅲ. 연구분석 및 진행 과정 ····· 27
1. 연구 설계 ····· 29
2. 자료수집 ····· 32
3. 자료분석 ····· 34
Ⅳ. 연구 결과 ····· 37
1.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의 경험 범주화 ····· 39

2.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의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분석 ····· 44
3. 충남 민주시민교육 참여 경험의 핵심 범주 ····· 66

Ⅴ. 정책 제언 ····· 71

1. 민주시민교육 담당 지원 조직 구축 필요 ····· 73
2.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영역 확장 ····· 74
3. 실무력과 전수능력을 구비한 활동가이자 교육자인 주체 양성 ····· 76
4.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 ····· 77

참고문헌 ····· 79

표 차례

[표 1]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국회발의 현황(2020년까지) ····· 15
[표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제 및 세부사업 ····· 16
[표 3] 지자체 및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2020년 기준) ····· 17
[표 4]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주요사업 ····· 19
[표 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 20
[표 6]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목적, 정의 내용 ····· 22
[표 7] 충남 주제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단위 : 개) ····· 23
[표 8] 2020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8개 공모사업 프로그램 ····· 24
[표 9]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 30
[표 10]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 33
[표 11] 충남민주시민교육 인식 실태 개념 및 범주화 ····· 40

그림 차례

[그림 1] 본 연구 절차 ····· 7
[그림 2] 충남 4대권역(북부권, 내륙권, 서해안권, 금강권) ····· 32
[그림 3]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한 분석 틀 ····· 34
[그림 4]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태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44
[그림 5]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현황 인식과 요구 ····· 67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민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 성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왔다. 나아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적 삶'의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점차 확대되어왔다. 그리하여 2000년대 이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시민교육활동가들의 활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장은주, 조철민, 이다현 외, 2020 참조)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과 민주주의의 본질적 관계 때문에 필연적인 귀결이다. 『민주주의의 모델』(Held 1987, 이정식 역 1993; 박찬표 역, 2010)에서 지구상의 민주주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지적하였던 D. 헬드는 지구화시대 이후의 민주주의를 방향을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민주주의와 시민의 관계에서 찾았다. "시민(citizen)이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지니게 될 때 민주주의는 그 이름에 적합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민주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련의 권리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그 이름처럼 가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지역에 대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는 것"이다.(235) 그리고 이것은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할 자율성의 원리가 보장되어야 하며(247),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곧 시민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과 관련된 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정치생활이 인간생활의 본질적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Held 1991, 안외순 역, 1996, 272 및 235, 247 참조)

요컨대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제도 구축도 필수적인 동시에 항상적으로 민주적인 시민을 재형성하는 교육도 부단히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민주시민이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훌륭한 소양을 지니도록 민주시민이 민주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재형성할 때만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양자는 선순환적 관계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교육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눈부신 변화의 그늘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비민주적 일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요구는 민주사회로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시민의 과제를 찾고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각계에서 민주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단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지역 단위에서도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충청남도 역시 2019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권리 보장과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성인 대상의 교육의 경우 대부분 평생교육 분야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대부분 교육내용이 문화예술과 직업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 사실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향이 입시 중심의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사실상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도민의 생활 속 민주주의 구현과 지역 과제 해결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충남의 경우 아직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겠다.

그간 충남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기존 연구 혹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 중장기교육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에 현황에 대해 이 선행 조사에서도 이미 다음의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직접적으로 충남의 민주시민현재 충남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기존 조사에 의하면 충남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자치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장애인교육, 성평등/성주류화/성인지교육, 자원봉사교육, 문해교육, 행복학습, 시민배움터 정도로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도정영역별 전문교육이라 민주시민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송두범, 2018)

둘째, 대부분의 교육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중에 민주시민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영역과 비교해 가장 저조하며, 그나마 2014년 8개 프로그램에서 2017년 1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양적·질적인 면에서 지극히 저조한 수준이다.(양병찬 외, 2019)

그런데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 외에도 본질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는 통계방법을 사용할 것과 통계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은 질적방법이 수반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점이 추가되어야 함을 말한다.

셋째, 위의 조사에서 말하는 통계조차도 사실 충남 전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불분명한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의 현황파악을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넷째, 게다가 본 연구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현상, 곧 일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특정 이념과 정파의 교육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현황조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충남 단위에서 이러한 연구는 대도시권과 비교하여 도민의 생활, 지방자치 활성화,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맥락이 상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주로 대도시나 해외의 우수사례를 제안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것은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지역 맥락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시민성(citizenship) 학습을 위해 지역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실태조사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충남에 기반하여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토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조사와 분석 결과를 기초로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소 및 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론적이나마 정책적 제안을 시도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다음 2장에서 본 연구의 배경 이해로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기존의 정책추진 현황 및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시행 현황에 대해 간단히 개괄하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 본격적으로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고찰하되, 현재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필드 연구를 행하되 질적 방법론을 채택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상황을 전후 맥락과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당사자들의 문제의식과 향후 주체적 실천 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는 충남 지역에 밀착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로서 충남 민주시민교육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에 밀착하는 질적 연구 방법(김영천, 2012)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 사회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Strauss&Corbin, 1990)을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명칭처럼 해당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제공되는 다양하고 특정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에 기초한 이론적 구성을 구축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의 4개 패러다임에 맞춰 이 연구의 결과로서 충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중심현상과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의 내용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충남의 현실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활성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본 연구의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연구의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연구의 내용	
↓	
연구 방향 설정 및 기초 자료 조사 • 연구 방향 설정: 내용, 접근방법 구체화 • 충남 및 전국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개괄적 검토	• 연구진 토의 • 문헌 분석
↓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태 조사 • 연구참여자 발굴 및 선정 (권역 및 영역별) • 면담 도구(면담지) 발굴 • 면담 실시 및 분석 •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통해 분석 및 타당화 검증 (충남에 근거한 중심현상, 인과/맥락/중재적 조건 기초)	• 현장방문 면담 • FGI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안 및 정책 제언 •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구상 •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구상	• 연구진 토의

[그림 1] 본 연구 절차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Ⅱ. 민주시민교육 현황

Ⅱ. 민주시민교육 현황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상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요 주제인 민주주의가 개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인지 공동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인지조차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이 다루어야 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내용만 하더라도 일상의 문제부터 사회적, 국가적 문제 모두를 포괄하고 있어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만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을 구분하기는 어렵다.(정원규 외, 2019)

이와 같이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두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상의 개념으로는 2016년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발의, 계류 중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2016.9.19.)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이고 당위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와 관계자의 경험과 증언을 바탕으로 귀납적인 개념을 도출한 연구도 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정원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교육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정치를 포함한 정치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원규 외(2019. 이 외에도 홍윤기 외, 2009; 강원택&김종법 2011 등 참조)

위 두 개념 모두, 앞 장에서 언급했던 헬드의 '양면의 민주화' 논의와 궤를 같이 함으로써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본질에 보다 더 가까운 정의라고 하겠다. 이를 전제로 '민주

시민교육'에서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시민'이라는 교육의 대상성만이 아니라 그 주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내용을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시민'이라는 대상이자 주체에 대해 그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체'인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끌어내어 그것을 교육의 내용이자 결과로 정책에 투영시키기 위한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시민'이 교육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가 될 때 '민주시민교육'의 궁극 목적이 완성된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민주시민교육은 역사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멀게는 조선말기 동학농민혁명기에 농민군이 설치한 주민자치기구인 집강소, 독립협회 등 개화파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각종 강연회와 만민공동회 등을 들 수 있다. 1894년을 전후한 동학의 농민군은 집강소(執綱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및 정부와 함께 협치까지 실천했던 점(안외순, 2019)에서 초보적인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1896년-1908년까지 왕성했던 독립협회를 비롯한 각종 애국계몽단체들이 전개했던 국민 계몽교육을 통한 국권 수호 노력(조규태, 2017) 역시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의 일차적 정의에 부합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세기 초반 설립된 1903년 YMCA와 일제 강점기에 출범한 1913년 흥사단 그리고 1922년 YWCA 등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사회교육 활동도 민주시민교육의 초기역사로 볼 수 있다(권진욱, 2018).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주로 관주도 '동원민주주의 교육'이 진행되면서[1] 역설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승만 정권 시절 문교부 정책으로 반공사상을 주입시키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정도의 초보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진행되기는 하였다(신두철·허영식, 2008). 또한 1960년대 들어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공교육의 강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교육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1968년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의 상징인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및 1970년대 '재건국민운동'[2]이라는 정부주도의 정치교육과 새마을 운동은 시민의 저항의식을 낳게

1) 실제 이런 측면에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여 시민교육 자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박재창 외, 2007)

2) 재건국민운동은 생활개선, 문맹퇴치, 질서 지키기 등 다양한 생활교육과 남북대결 상황에서 남북한 체제

하였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빈민, 농촌, 노동운동 등 지역주민 의식화 교육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카톨릭 농민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도시산업선교회 청계피복노조 노동자교실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역시 경제성장과 반공을 앞세워 국가주의적 국민교육과 의식화를 위한 국사, 국민윤리, 환경, 경제, 통일안보, 새마을 교육 등의 국민교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반면에 노태우 정권하에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5차 교육과정(1987)의 교육목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과 민주정치의 원리 및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사고,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3)]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추진한 각종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4년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포럼'이 행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인 1995년 관련 학회(예를 들어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등이 창립되었다.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내용도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활동가 중심의 지역주민운동을 통해 생산공동체운동, 환경운동, 풀뿌리 선거운동, 여성운동, 공부방 등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존의 시민교육이 보였던 강의 위주, 교육자 위주의 일방적 강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 특히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포럼과 학계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1997년 10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하였다. 이에 박명환 의원 등의 발의를 통해 1997년 최초로 15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를 넘김으로써 자동폐기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의 요구를 수용하여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 발족한 통일교육원과 199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관련 교육이 진행되기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는 승공이 핵심내용으로 다루어졌으며, 유신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인교육기관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유신교육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3) 제5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교육목표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도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며"라는 구절이 유신정권 시기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유신독재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자 했던 의도를 지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작하여 2002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년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및 관련 부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활발하게 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요구가 주요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제도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부응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 부족, 추진 주체들 간 이견, 추진 동력의 약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입법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조속한 입법화가 절실하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 역시 이전에 비교해서는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부 혹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권의 변동에 따른 성격과 진행에 사실상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여전히 시민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대우하는 일방성을 노정하고 있어 '대상이자 주체여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부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2.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 동향과 정책 추진 현황

1) 중앙정부와 국회의 추진 현황

학계와 시민사회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국회는 관련 법안을 여전히 입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노정하고 있다.

앞 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처럼, 1990년대 이후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처음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된 것은 1997년으로 현재 21대 국회까지 무려 25년 가까이 발의되고 있으나(아래 [표 1] 참조) 모두 입법화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곤 하였다. 현재는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4]과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표 1]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국회발의 현황(2020년까지)

국회	년도	법안명	발의자
15대 국회	1997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박명환 의원 외
16대 국회	2000	시민교육진흥법안	김찬진 의원 외
17대 국회	2007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공책 의원 외
19대 국회	2015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언주 의원 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의원 외
20대 국회	2016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의원 외
	2019	민주시민교육지원에관한법안	소병훈 의원 외
21대 국회	202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의원 외
	202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 의원 외

이렇게 국회에서 25여년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발목 잡혀 중앙정부에서도 관련 조치가 지지부진한 공백을,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개별 기관과 부처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다소나마 메꾸어왔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4) 제4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3.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4.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공공영역 가운데 주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활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2002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라는 비전하에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 마련',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조성',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구축',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이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보면 '역량강화와 연결을 통해 전국의 시민사회에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라는 특화된 비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시민의 자발적 참여, 공동체성 및 실천성 강화라는 사업원칙을 실천해왔다. 동 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아래 [표 2]에서 보는 과제 및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연구, 교육, 교류사업을 실천해온 점이 주목된다.

[표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제 및 세부사업 (동 사업회 홈페이지)

구분	실천과제	세부사업
연구개발	일상까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개발	1. '한국민주시민교육론'발간 2.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3. 영상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전문가 양성과정 2. 강사 양성과정 3.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사연수, 사회참여) 4.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시민사회, 학교)
교류협력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구축 지원	1. 전국민주시민교육 협력 2.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3. 민주시민교육 포럼

2) 지방정부의 추진현황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국회의 발목잡기에 붙잡혀 별다른 실천을 못하는 사이 그 돌파구는 지방정부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발전을 보여왔다. 2014년 서울시에서 제정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필두로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중앙차원의 입법운동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선두주자는 서울시 조례제정과 이를 통한 각종 정책 시행이다. 2014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지와 주민 주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는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아래 [표 3]은 2020년 기준 지자체 및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지자체 및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2020년 기준)

구분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1개)	서울(2014), 전북(2016), 경기(2017), 전남(2017), 세종(2018), 부산(2019), 대전(2019), 인천(2019), 충남(2019), 충북(2019), 광주(2020)	
기초자치단체 (34개)	서울시(7개)	강서구(2017), 광진구(2017), 노원구(2017), 도봉구(2017), 서대문구(2019) 강북구(2020), 구로구(2020)
	경기도(19개)[5]	광명(2017), 안양(2017), 용인(2018), 하남(2017), 의정부(2017), 고양(2018), 수원(2018), 남양주(2018), 파주(2018), 양주(2018), 군포(2019), 포천(2019), 이천(2019), 화성(2019), 구리(2019), 연천(2019), 안산(2019), 양평(2019), 여주시(2020)
	인천시(1개)	서구(2019)
	울산시(1개)	울주군(2018)
	경상남도(1개)	김해(2018)
	충청남도(3개)	아산(2018), 천안(2019), 계룡(2020)
	전라남도(2개)	목포(2019), 여수시(2020)
교육청 (13개)	경기교육청(2016), 충북교육청(2016), 전북교육청(2016), 충남교육청(2017), 전남교육청(2017), 서울교육청(2018), 광주교육청(2018), 부산교육청(2019), 강원교육청(2019), 인천교육청(2019), 경북교육청(2019), 세종교육청(2019), 제주교육청(2019)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내용 등을 보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최초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인 2014년 서울시 조례를 표준조례로 삼아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제도에 부합하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6]를 제정하였다. 본 조례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의 일상 속 민주적 시민성 실현' 이라는 비전으로 2015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및 민주시민학습조직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2017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에서는 '시민공론 촉진 및 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및 실천 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 활동'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표 4] 참조)

5) 2015년 제정된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2020년 제정된 성남시 평생교육기본조례'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같은 해 폐지되었다.

6)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표 4]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주요사업

3대 중점과제	주요사업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실천학습 강화	1. 실천과 참여 중심의 시민제안 프로그램 활성화 2.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습활동 운영지원 3. 자료조사 및 콘텐츠 내실화
공유·확산을 통한 저변 확대	1.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공감대 형성 2.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3.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교류 추진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1. 지역기반의 인적자원 발굴·활용 2.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3.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경기도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 제도의 발전에 맞는 경기도민의 시민적 권리의식과 이에 대한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7]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제1기 그리고 2019년에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2022)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제2기 종합계획에서는 '깨어 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비전하에 함께 주인 되는 도민학습 저변확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민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목표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사업들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5] 참조).

7)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표 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분야	세부사업
특화 콘텐츠	1. 민주주의(시민주권) 체험 2. 마을 민주주의교육 온(ON) 프로젝트 3. 공무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기반구축	1. 청소년 온라인 콘텐츠 개발 2.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사업 3.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4. 민주시민교육 설립 운영방안 연구 5. 권력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 도민강사 양성 및 파견 2. 교재와 교안 통합개발 3. 도민강사 온라인 강의역량 강화 4.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3) 전국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 현황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교육이 성장과 발전을 통한 경제 활력에만 방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소홀히 취급되었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를 진단하고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제에 대해 고민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시민사회단체, 학계, 공공기관,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가 잠시 결성되기도 했고 '시민교육포럼'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던 시민단체와 교육영역별 분화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환경의 변화와 정부 시책에 때로는 부응하면서 때로는 극복을 시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중앙이 아닌 지역조직의 증가와 마을공동체 운동 등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의 지역화가 시작되었다. 지역화된 민주시민교육은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자원봉사, 사회적 자본 등의 사회적 의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실제 활동가들 상당수가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활동가였다. 시민사회 영역이 주관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사례를 보면 우선 노숙인을 대상으로 기능적인 자활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동체적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지향한 '성 프란시스 인문학 강좌', 대학 차원에서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시민교육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등을 들 수 있다. (이다현, 2018)

마지막으로 현재 민주시민교육 시민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며, 지역과 영역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지원 및 소통과 협력을 통해 헌법에서 약속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의 기회증진에 이바지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창립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빼놓을 수 없다.

초기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 YMCA,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14개 광역지역 모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설립되었으며,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제정 운동, 지역 간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전국민주시민교육토론회 개최 등을 주도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황

1) 충남 정부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개황

충청남도는 2016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여성적 관점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과 인권 및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후 2019년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표 6]) 제정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은 조례에 의거하여 '충남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민관의 소통창구인 '충남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두고 있다. 충남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관련 정책의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6]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목적, 정의 내용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 가치 ·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내용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이해 2.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또는 평화통일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현재 충청남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20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양병찬, 2019)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에서는 '생활 속 참여와 포용성 함양을 통한 더 행복한 민주시민 양성'을 비전으로 '개인적 시민성 역량강화', '사회적 시민성 역량강화', '공동체적 시민성 역량강화'라는 3대 목표와 4대 세부 추진전략 그리고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8]가 제정된 이후 충남교육청은 '주권자로서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시민 역량 함양',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공동체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8)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은 현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2년 개원한 교육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기반강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2014년부터 2017년간의 프로그램 현황이다. ([표 7]) 민주시민교육과 직접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 시민참여교육은 그 열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 전체 프로그램 5276건 중 8회, 2015년 5025건 중 7회, 2016년 5517건 중 11회, 2017년 4913건 중 15건으로 다른 분야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표 7] 충남 주제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기초문해교육	51	41	51	77
학력보완교육	533	550	511	538
직업능력교육	1,007	797	1,033	868
문화예술교육	2,453	2,337	2,490	2,147
인문교양교육	1,224	1,293	1,421	1,268
시민참여교육	8	7	11	15
합 계	**5,276**	**5,025**	**5,517**	**4,913**

※ 출처 : 양병찬 외(2019)에서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재구성해서 작성

그래도 2016년부터 점차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다.

2020년이 경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공모로 총 8개 기관을 선정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표 8])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민의 사회적 역량강화와 자질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제별 공모를 통한 도민 밀착형 민주시민교육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표 8] 2020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8개 공모사업 프로그램

기관	강좌	지역
협동조합 토종관	**민주사회를 이끌어 갈 선배시민의 품격** · 공동체를 위한 리더-선배시민이란 무엇인가? · 민주시민교육-어디서 누가 해야 할까? · 분권과 자치 시대의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아산
충남인권교육 활동가 모임 '부뜰'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민주시민 공론의 장** · 민주사회의 기본가치인 헌법, 인권, 젠더의 내용 학습 · 공론의 장을 열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심화	아산
민들레 역사문화연구소 협동조합	**충남 역사탐험대**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기 위한 역사문화 교육 진행 · 지역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재의 소중함을 학습	아산
햇빛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민주주의 회의 진행법 실습 워크샵** · 자율과 자치, 다른 주권자에 대한 인정과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 민주주의 핵심인 회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학습훈련을 통한 주권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능력 향상	공주
놀이문화 발전소 '판'	**찾아가는 세계시민학교** ·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역량(공존, 상생, 배려)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및 시민의식교육 · 지속가능성, 건강, 성평등, 평화와 정의 등의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 운영	당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 합회 예산지부	**생활 속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이 되는 법'** ·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지니는 가치를 이해 · 뉴스의 사회에서 올바른 해석과 자신의 생각을 토론	예산
화양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과 함께 하는 내 고장 역사탐방** · 충남학, 서천학, 화양이야기 및 문화유적지 탐방 ·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통한 지역민 인식개선	서천
노작미디어	**민주시민교육 #잘한다** ·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 사회구성의 이론과 올바른 실천 연구와 개발 · 지역의 민주주의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과 공유기회 제공	천안

이외에도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을 보면 충청남도 자체 사업,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등 산하기관 그리고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진다.

몇 가지 예로 충청남도 주최로 도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참여예산제도 및 충청남도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주민자치 강사양성과정과 공동체리더 실무과정을 담당한 '상설주민자치학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2020년부터 충남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남에서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활동, 2017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9년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그리고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조례 제정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점차 시민사회 영역과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짧은 그 역사만큼이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실천은 아직은 관 주도적이고 그런 만큼 주변적이고 가변적이어서 고정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2) 충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동 현황

충남지역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특히 2019년 '천안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2020년 '충남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창립 등으로 대표된다. 특히 이 두 그룹은 순수 시민조직으로서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과 협력강화, 충남민주시민교육 포럼과 사례 공유회 개최, 전국민주시민교육 활동가대회 개최, 충남민주시민교육 교사연구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충남의 시민분야 민주시민교육 운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 민관협력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만의 주도적인 활동은 초기 단계임이 사실이다. 그것은 충남지역의 시민사회의 경험과 민주시민교육 활동 역사가 짧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그 정치사회적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시민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조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충남에 거주하면서 충남지역 시민사회에서 주제와 명칭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노동, 인권, 자치, 청소년,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민주시민교육 인식과 경험'을 인터뷰하고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Ⅲ. 연구분석 및 진행 과정

Ⅲ. 연구분석 및 진행 과정

1. 연구 설계

이 장은 2020년 현재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체적 이론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민주시민교육 인식과 경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들 중에서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직관력을 제공하고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둘러싼 과정에 대해 추상적 개념화와 이론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질적 연구방법(Strauss & Corbin, 1998)이다. 실증주의적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 이전에 이미 사전에 설정된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이론모형을 조작화 한 변수들에 대상을 계량적으로 비교해보는 연역적 방식을 기본으로해서 진행되는데 반해 근거이론에서는 이론 형성을 연구의 결과로 간주한다. 즉, 현상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특정한 절차를 따르는 엄격하고 체계적 방식으로 이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아 귀납적 진행을 위한 지침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위주체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되는 자료에 뿌리를 두고 있다.(Glaser, 1978; 15) 그런데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연구하는 본 조사 역시 무엇보다도 활동에 참가한 주체들의 경험과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근거이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인식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그에 따른 그들의 경험은 어떠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했는지 분석했다. 또한 그 결과 현재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파악했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 향후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Strauss & Corbin(1998)의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고, 이때 연구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적절성과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가 되도록 수집하는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는 현재 충남에 거주하면서 관련 기관·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초기 단계부터 이론적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을 순환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새로운 사건 및 사례에 초점을 두어 추가적으로 표본추출을 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때 표본 추출을 종료하였다.

연구에 참여자 22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지역	인터뷰이	주제 (내용) 영역	직업	민주시민 교육 관련 역할	민주시민교육 참여 경험
북부권	박청년	참여/자치	시민사회 활동가	관리자	환경교육, 시민참여, 청소년 자치 등
	이인권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	관리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도민대상 인권교육 등
	차연대	참여/자치	시민사회 활동가	관리자	인문학 강좌, 책 읽기 모임 등
	장정의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	진행자	청소년 인권교육, 책 읽기 모임 등
	조참여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	학습자	노동법률, 인권교육, 자치분권 등
	이마을	마을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관리자	생명살림지도자 양성과정, 퍼실리테이터 과정 등
	이바름	자원봉사	시민사회 활동가	관리자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퍼실리테이터 과정 등
	조대안	자치	시민사회 활동가	진행자	대안교육,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추평생	평생교육	시민사회 활동가	진행자	학부모 프로그램 등
	김정의	교육	시민사회 활동가	학습자	학부모 프로그램 등

지역	인터뷰이	주제 (내용) 영역	직업	민주시민 교육 관련 역할	민주시민교육 참여 경험
서해안권	신평생	평생교육	임기제 공무원	진행자	마을공동체교육,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
	조선한	평생교육	주민 활동가	학습자 → 진행자	민주시민교육 강사과정, 청소년역사알기과정 등
	정자치	자치	시민사회 활동가	진행자	주민참여도시재생 프로그램, 학 민주시민교육 등
금강권	한환경	생태/지속 가능한 발전	시민사회 활동가	진행자	환경교육 프로그램
	박공익	자치	중간지원 조직	관리자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박여성	여성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관리자	학교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등
내륙권	복기쁨	협치	시민사회 활동가	진행자	자치분권/주민자치 이해 프로그램 등
	이공책	성평등	학원 운영	학습자 → 진행자	동학 농민운동 해설사, 성평등 교육 등
	김협치	협치	임기제 공무원	진행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협치전문가 양성과정 등
충남도	한활동	협치	임기제 공무원	진행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협치전문가 양성과정 등
	김주민	주민자치	중간지원 조직	관리자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치분권교육 등
	김공익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	관리자	공익활동지원 사업, 시민활동가 교육지원사업 등

연구 참여자 선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주체를 만나기 위해 시민사회, 정부와 의회, 중간지원조직의 참여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되, 내용으로도 인권,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주요 주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업무의 관리자, 실무 진행자 혹은 강사, 학습자의 입장을 두루 포괄했다. 지역 배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남 4대권역(북부권, 내륙권, 서해안권, 금강권)([그림 2])에 골고루 안배하였다.

[그림 2] 충남 4대권역(북부권, 내륙권, 서해안권, 금강권)

2. 자료수집

면담은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총 22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11월까지 진행되었다.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이 제시한 날짜를 제안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다. 2명의 참여자를 함께 만나는 것으로 하였으나 때에 따라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고, 많은 경우에도 3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면담은 2~3시간 정도 1회 실시되었으며, 추가 내용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2회 면담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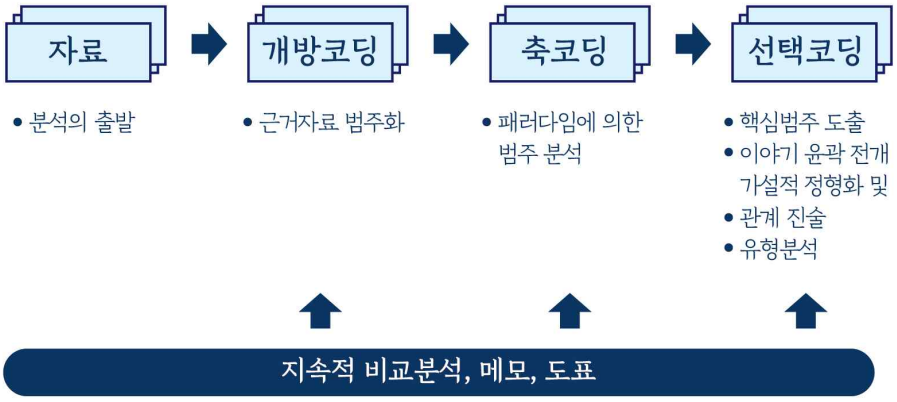
연구자는 개별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비롯한 익명성, 내용 비밀 보장, 면담내용 녹음, 연구용도 활용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심층 면담 질문은 [표 10]과 같이 반구조화 된 질문을 대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민주시민교육의 관계자라고 분명히 인식하지 않는 때도 있었으나, 면담 과정 중에 현재의 활동이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던가 혹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어떠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경험하였는지를 생애사적 연구방법에서 사용하는 내러티브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방법을 활용하였다.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방향성을 갖게 되고, 복잡한 이야기를 타인이 잘 이해하도록 풀어나가게 되고, 구술자는 이야기의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의 규칙성 때문에 내러티브 인터뷰는 근거이론의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성희, 2004).

[표 10]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면담 질문(안)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①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 ② 일(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2. 민주시민교육 실태 ①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은 어떠한가요? (구체적 상황) ② 민주시민교육을 하기에 현장/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배경 맥락, 분위기, 여러 가지 사건 등) ③ 민주시민교육 사업/프로그램 경험은 어떠한가요? ④ (1과 관련하여)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⑤ 어떠한 대응/활동/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⑥ 다음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 본인이 기획/학습(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 있다면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이러한 유형 분류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기타 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요? ② 기타 연구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역시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분석 단계인 시작코딩(Open coding), 축코딩, 선택적 코딩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자료 수집과 동시에 [그림 3]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한 분석 틀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통해 개념을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의미 단위를 하위 범주로 묶은 후, 범주로 무리짓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탐색하여 그러한 경험이 현재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실천(행위)과 관련 있는 개념 및 범주를 탐색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분석된 자료를 재조합하기 위하여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하위 범주와 범주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축코딩은 패러다임(paradigm)을 이용하여 범주들 간의 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을 탐구한다.

이 연구에서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 코딩 후 축 코딩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분석한 범주들이 충분하게 현상의 구조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범주를

재형성하였으며 이 과정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추가 인터뷰를 통해 다시 개념화-개방코딩-축코딩-선택적 코딩의 절차를 거칠 것이다.

선택 코딩은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선택 코딩은 연구의 중심 주제인 핵심 범주를 결정하고, 이론적 도식의 윤곽을 잡은 후에 이론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즉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이를 도식화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3). 본 연구에서도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의 핵심 범주를 파악하고 이야기 흐름,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범주를 통합시키고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한 과정을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의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하고,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 및 신뢰성은 연구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자료 수집, 분석 단계는 물론 연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질적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차용되는 Lincoln&Guba(1985)의 방법은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타당도와 신뢰도 개념 대신 진실성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진실가치(trut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연구의 엄격성을 기하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 전 본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미리 연구계획서를 보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사전에 관련하여 어떤 관점이나 결과를 증명하려는 의도 없이 연구를 시작했고, 연구자 워크숍을 통해 분석된 내용에 대해 상호 토론하면서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IV. 연구 결과

Ⅳ. 연구 결과

근거이론에서 자료 수집에서부터 분석은 시작된다. 이 단계는 면담을 통해 얻은 녹음 자료를 모두 전사(transcription)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인 비교분석과 메모 기법을 활용해 코딩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대화 내용, 면담 당시의 상황, 연구 참여자의 태도, 면담 시 연구자가 떠올린 생각 등을 모두 기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녹취 전사자료는 현재까지 A4 용지 250페이지 정도였으며, 이를 모두 전사하여 줄 코딩과 문단 코딩을 동시에 진행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주요 발언 내용과 연구자의 생각을 따로 정리하였으며,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진행할 때 함께 검토하였다.

1.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의 경험 범주화

개방코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면담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 질문과 비교 분석 과정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 개념을 묶어 범주화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전시켜 코딩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와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원자료의 의미를 살리는 표현으로 명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96개의 개념으로부터 40개의 하위범주와 19개의 범주를 탐색할 수 있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11]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주화와 같다.

[표 11] 충남민주시민교육 인식 실태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민주당을 위한 교육이라는 오해	‘민주’라는 단어 사용의 어려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왜곡된 이해
정치적 불이익에 대한 부담		
민주화 운동지 방문 이후 의회에서 비판 받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교육과 사상교육을 동일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곡해(사상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애매한 관계		
기법 중심으로 경험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한정적 경험	
효율성 중심의 평가 틀		
공무원의 미온적 태도	경직된 관료사회	경직된 관료사회
변화없는 공무원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한 관료	성과주의 관료	
민주시민교육 주체의 부재	시민사회 약화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상황
안정적 재원 확보 어려움		
학습자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무자		
시민사회 활동가 소진		
과거 민주세력 의제의 한계	시민 공감대 얻기에 실패한 시민운동	
시민사회 운동의 경직성		
시민사회의 경계		
수도권 지자체 정책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	정책 변화에 따른 변화 움직임	참여 민주주의의 기회 확대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모이는 충남의 변화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의 확장		
소통과 공간 채널의 다양화 변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출현		
제도화와 다양한 사업의 출현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	
중앙의 변화에 영향 받은 충남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의 변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의 한계 절감	강좌 중심의 교육 활동	프로그램 틀에 갇힌 민주시민교육
학습 후 활동과 연결(지원) 부족		
학습모임에서 지역 활동으로 확장 필요(내부적으로)	지역사회 실천에 대한 학습자의 욕구	
학습자의 욕구를 지원하는 기관 역할 부재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	활동의 중심 축 부재
실천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필요	노하우 부족	
민주적 툴이 민주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음	토론 수업의 어려움	
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 툴		
주요 업무에서 밀리는 민주시민교육	중요도에서 밀리기	
시민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개인과 사회 문제의 단절	시민의 삶과 분리된 민주시민교육
자기 문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참여		
시민의 의제와 시민사회 의제의 불일치		
학습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	학습하지 못하는 시민	
학습하기 어려운 일상 생활 환경		
도 소재지 중심의 사업/프로그램 운영	소외되는 지방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기회 부족
좋은 강사 모시기의 어려움		
시민의 접근 기회 제한	한정된 교육 프로그램	
의뢰를 받으면 강의를 나가는 정도		
단발성 공모 사업	교육 지속성 확보 어려움	
제도(양성평등법)의 확대로 교육 기회 확보		

개념	하위범주	범주
소통과 민주적 방식의 모임과 교육 출현	민주적 방식의 학습모임	자발적인 민주주의 학습 요구 출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시민 생활 속의 민주주의)		
학습 모임의 출현	스스로 민주시민교육 참여하기	
자발적 학습 모임의 출현		
다양한 시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공부 모임 운영		
토론이 가능한 학습자 발견	시민들의 학습 역량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성장
상식이 통하는 생활 현장	지역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가능성	
논쟁을 담은 인권교육 진행 경험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시도	민주시민교육 말하지 않기	유연한 대처
반드시 “민주시민교육” 이어야 하나?	다르게 접근하기	
외적보상의 중요성	학습자 욕구 충족의 중요성	시민 학습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함
스스로를 찾고 자존감을 찾고 싶은 학습자		
우리에게는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낯선	학습자의 학습 요구 발견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방식		
대상에 따른 다른 접근 방식 필요		
어른과 청소년의 요구 차이		
개인의 욕구를 인정하는 방식의 교육 접근		
부담없는 학습모임을 통해 앎의 기쁨을 느낌		
현장의 현황 파악	지역 기반 학습자 욕구	시민 주도 학습기회 지원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들의 학습 요청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요구 발생	
해결하지 못한 과제 해답 찾기		
배움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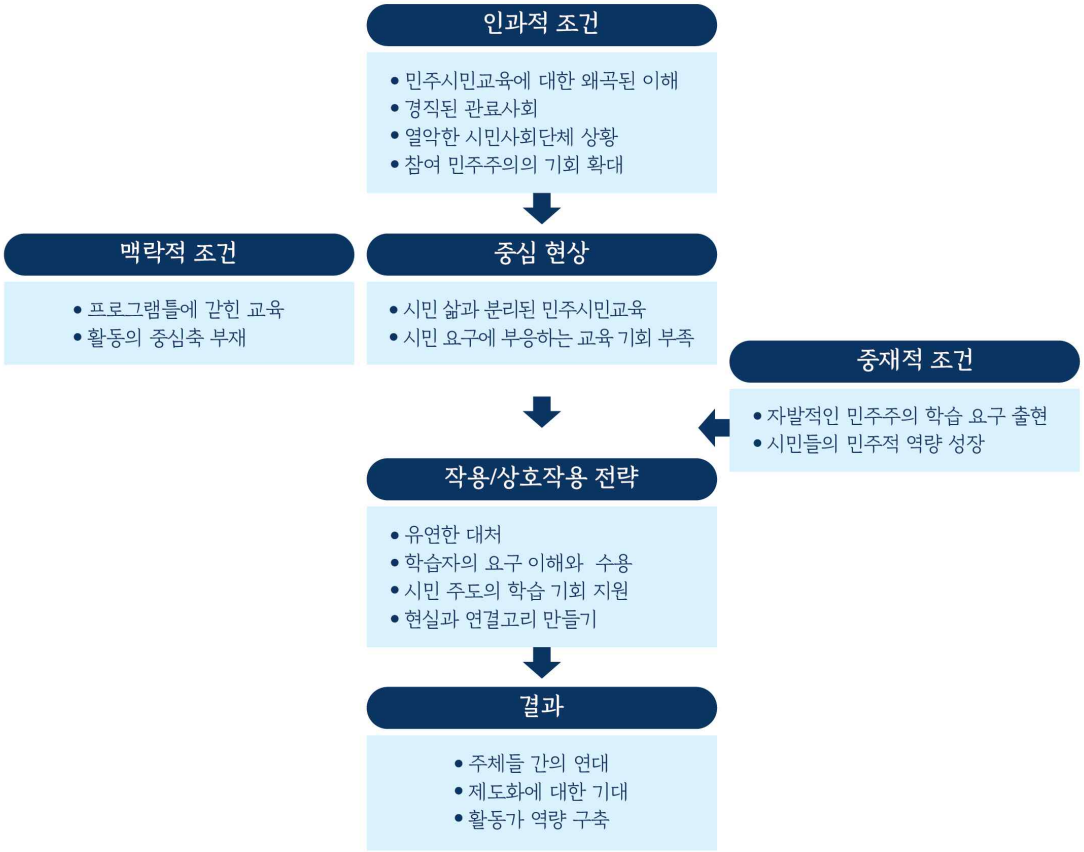
개념	하위범주	범주
삶의 민주적 기본 토대로서 민주시민교육	생활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지향	현실과 연결고리 만들기
지역의제를 민주시민교육화 시키기		
다양한 시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공부 모임		
현안문제와 결합하는 민주시민교육		
생활 현장 문제로 접근하는 민주시민교육	생활공간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	
생활공간 안에서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 현장으로서 마을		
시민의 활동 인정하기	실천과 연계하기	
현장에서 부딪쳐서 경험하기		
작은 참여활동(개인적)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	현실과 맞닿는 교육하기	
강의장 밖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민사회와 학교 민주시민교육 결합 필요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만나기	주체들과 연대하기
학부모 교육으로 문 두드리기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간의 관계망 필요	민주시민교육으로 모이기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		
연대를 꿈꾸기		
지역 단체와 협력 필요		
지역 운동단체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		
침해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	실천가 양성과 역량 키우기	활동가 역량 구축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가 양성 필요		
다양한 그룹의 중간 리더자 키우기		
안내와 설명을 해 줄 시민 지원 역할 필요	조직과 제도 갖추기	제도화에 대한 기대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찾기		
관의 적절한 포지셔닝 찾기(지원 중심)		

2.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의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와 연결해 현상에 대하여 더 정확하고 완벽한 설명을 이루고자 진행되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축 코딩 과정에서는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 분석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었는지 보여준다(Strauss & Corbin, 1998).

2-1.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 참여자의 면담 자료에 대한 개방코딩을 도식화한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태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태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2-2. 인과적 조건 : 충남 민주시민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상황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사건이나 일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결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왜곡된 이해', '경직된 관료사회',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상황'이 인과적 조건으로'가 충남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움을 겪게 된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참여 민주주의의 정책적 기회 확대'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 정치, 문화 등의 변화가 민주시민교육에는 긍정적인 인과적 조건을 만들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2-2-1.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왜곡된 이해

연구 참여자 다수는 충남 지역에서 민주주의나 진보적 정치 의제와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과 관계되어 있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화하는 교육으로 받아들여 진다고 한다.

>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이런데도 가보면 아예 공공연하게 요즘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통용되는 곳이예요. 여기가
>
> (조선한)
>
> 인권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 용어 표현이 됐었는데, 민주시민교육 용어 표현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의회가 지금 OOO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불편함,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의식화, △△△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 중에 하나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있었기에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공공영역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어렵고 태클을 받기도 했는데
>
> (이인권)
>
> OO이라는 지역이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면 압박이 오는 지역이에요. 시끄러운 사람들,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 (조선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출범하면서 저는 당연히 그 모임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해 뛰는 단체인데 그랬는데 그러시는거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백대 과제 안에 봐라, 여기 이 웹자보라 그러나 여기에도 있지 않느냐 이걸 옛날로 치면 사상 교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반공 교육, 사상 교육 열변을 토하시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김정의)

특정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었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보니 아이들을 대상으로 광주를 다녀오면. 갔다 오면 무슨 애들한테 국가의 기강을 흔들리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너네 무슨 집단이냐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 중에서

(신평생)

민주시민화교육? 우리 단체에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어렵죠. 의식화교육이라고 딱 생각하죠. 우리는 주로 자원봉사교육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어르신이 대부분인데, 그런(민주시민교육) 교육은 어려워요. 오해도 있고

(이바름)

2-2-2. 참여 민주주의의 기회 확대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이 사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어, 정책적으로 시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충남 지역 활동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적경제, 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등이 정책화되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해당 사업 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에서 시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고 실행하는 방식의 방법 도입이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도시 시민 참여단의 분들이 처음으로 여성이 이러네? 이런 색다른 경험을 했던 저희가 요소요소 들어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공책)

우리 사회가 이미 한 단계는 지나갔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다양한 소수자들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는 조금 더 질적인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과 폭을 넓혀주고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인권)

(주민자치나 참여예산 같은 사업을 통해) 연습을 좀 했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배워보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학습이 될수록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시는 것 같아요

(김주민)

2-2-3. 경직된 관료사회

시민이 참여를 중요시하는 여러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배타적 입장을 갖는 관료사회 문화가 결국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사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군수분의 정당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연세가 초고령화이다보니 아직 민주시민교육, 참여, 인권, 자치 이렇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이게 자칫하면 나대고 나대는 사람들? 쎈 사람들?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인식으로 되돌아오지 않나
>
> (조선한)
>
>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틀을 바꾸려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소통하고 뭐하고 해서 위원회 만들고 시민들 참여하게 하고 저는 그런 걸 공주시에서 많이 열어주고 확장 시켜놨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공무원들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 (이공책)
>
> 그런 활동을 옮길려고 했을 때 좌절당했던 학습된 경험? 이런게 고고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 행정관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거는 안된다라고 행정에서 재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건의로 요청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
> (김주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신평생 역시 자치단체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제 속에서 자치단체장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시민참여 정책이나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 공공영역이다보니 공공을 주도하고 있는 수장의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밖에 없어요. 강사 섭외나 교육과정이나. 그런 건 기득권이 결정해놓은 지향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문화가 공무원 조직인거죠.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바꾸려고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튀어오르면 그게 자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
> (신평생)

2-2-4.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상황

공공영역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활동 추진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열악한 상황도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어려운 주요한 문제로 도출되었다. 제도화 논의 이전에도 시민사회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사회 전반에서 위축되고 있고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충남은 더욱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의 활동가 인건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재정적 상황,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력 부족, 지역에 건강한 시민사회단체 부족이 있었다.

진흥원 사업비가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활동가들의 노고는 무보수인거예요. 그런 걸 한두 번 하고 나니까 지쳐 나가떨어지는 거죠. 내가 시간과 애정을 쏟았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잖아요.

(이인권)

당진에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모여서 인문학 강좌를 했었고, 그 전에는 OOOO가 했었고. 요즘에는 실무력이 안되서 연결이 안되서 못하겠습니다

(차연대)

지역사회에서 겪는 궁여지책으로 시민사회 연대가 논산에 없어요. 의장님을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뵌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저한테 시민사회 연대가 논산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셔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앞선 시장선거 할 때 의제 제안 때문에 시민사회들을 다 소집을 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체 민원만 넣고 있는거야. 우리의 의제를 어떻게 갈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의제를 뭘로 만들면 좋겠는지 정말 단체 민원도 아닌 개인 민원, 이걸 가지고 정책 제안하자고 하는 것은

(박여성)

언제까지 시민재단이나 언제까지 소위 민주시민교육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의 순혈주의를 통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만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거에요. 이 의제는 그분들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적 의제와는 달라요

(복기쁨)

충남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져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사업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부분이 강조됨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내 주요한 의제로 만들 여력이 없는 단체 내부의 상황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은 하고 싶고, 해야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2-3. 중심현상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와 학습 기회 부족

충남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중심현상은 '시민생활과 분리된 민주시민교육',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기회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2-3-1. 시민생활과 분리된 민주시민교육

연구참여자들은 시민들이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의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련 있는 사안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당장의 필요나 문제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라기보다 다양한 사회 문제가 시민 자신의 문제로 체감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 시민들을 만나서 부딪쳐보고 캠페인에서 나눠보면 급하지 않아요. 우리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억눌려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그런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나 참여자들은 '아. 이거 불평등이구나'하는데. 탈핵 운동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근접에 살고있는 시민들이 아니다보니까 체감도가 낮아요. 저는 교육을 들어보면 당장 죽겠거든요.
>
> (박여성)
>
> 학생들 반응은, 관심가지는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고요. 노동이나 좀...(연구진 : 알바하는 친구들 많은데 노동인권은?) 고등학교는 알바보다는 공부하는 쪽에 더 있기 때문에 노동하고 멀어져 있는, 직접 와 닿지는 않아요
>
> (장정의)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많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거대담론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구성될 경우 당연히 참여 저조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이를 시민들이 무관심하다고 섣부르게 평가해버리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이는 맥락적 조건의 하위범주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시민사회 활동이 시민의 일상과 분리되어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도 '민주시민교육을 잘 모른다'라던지,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며 위축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이나 인권 등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가의 경우 자신의 활동 영역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지를 발언 중에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심지어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 안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 저도 민주시민교육이 저도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뭔가 확립이 안 돼요. 저도 배워나가고 싶어요.
> (조대안)
>
> 중첩되는 부분도 많은데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하는 인권교육은 크게는 민주시민교육 안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넓게 보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글쎄요. 아닌 것이 뭘까.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이인권)
>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죠. 선입견이라던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김공익)
>
>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하면서 저는 당연히 그 모임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해 뛰는 단체인데 그랬는데 그러시는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백대 과제 안에 봐라. 이걸 옛날로 치면 사상 교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정의)

2-3-2.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기회 부족

그러나 막상 관심 있는 주제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을 때, 연구참여자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여 학습하기도 했으며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와 맞아 떨어졌을 때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 부족은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기회가 부족한 데서 온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 시민단체 회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홍보 웹포스터를 보고 오시기도 했거든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강사가 기본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헌법이면 헌법,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그런 교육을 듣기가 힘들었다. 듣고 싶었던 의제고 그런 전문가로부터 직접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다.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시더라구요.
>
> (이인권)
>
> 지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는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기획과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시민들은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자체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하는 교육을 인권교육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보면 사실은 다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육이죠
>
> (이인권)
>
> 그런 강좌 처음 들어보셨는데 그랬더니 핀란드 교육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핀란드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그 분은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O당 당원이라서 그냥 얼굴 알고 이런 교육이 있는데 가보자 했을 때 갔던 일반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감탄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일상화되어 있는 아는 내용들이 이분한테는 너무 새롭구나
>
> (김정의)

2-4. 맥락적 조건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심 현상의 배경 변인이 되는 맥락적 조건은 '프로그램 틀에 갇힌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중심 축 부재'로 나타났다.

2-4-1. 프로그램 틀에 갇힌 교육

먼저 '프로그램 틀에 갇힌 민주시민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기에서 기인한 실천 방법의 협소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한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참여 활동과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강의 현장을 벗어나 이후의 활동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본인이 했던 배움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효용성을 느꼈을 때 시너지가 큰 것 같아요. 거기까지 못 나가는게 저희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 생태 자수 리폼을 했으면 바자회나 지역 활동에 참여해서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것까지 이끌어주면 좋은데 평생교육에서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 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
> (신평생)
>
> 내가 했었던 활동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봐야 그게 내 힘이 돼서 다시 성장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실천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교육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획자들이 교육을 열심히 해도 그런 것들의 나아감에 뒷받침을 해 주지 않는 사회가 안된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체험으로 단절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
> (조선한)
>
>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론적으로 수업을 해서 사람들이 크게 와 닿고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은데 현장에서 한번 부딪쳐보고 사람들한테서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변한다. 민주시민교육 안에서도 대화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장성을 어떻게 녹여내는 방식의 기획이나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
> (박청년)

2-4-2. 활동의 중심축 부재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변화와 맞물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 확대의 필요를 체감하고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할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활동가들의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고 각자의 암묵지로 머무르게 하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 이를테면 참여연대가 다 안고 우리는 자치적인, 우리 사업도 버거운데. 촉구는 할 수는 있겠죠. 시에다가 요구는 할 수 있을 텐데. 그 주체를 아직은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도 그래서 망설이고 있지 않을까
>
> (차연대)
>
>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충남 네트워크에서 진행되었던 것 잘 아시잖아요. 진행되었던 교육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오늘의 인터뷰처럼 경험들이 공유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측면을 저기는 저렇게 해결했구나 또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기획을 공유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니까
>
> (천안 S)

여러 영역에서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있지만, 단체 내부에서도 중심 활동이 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일을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뉴얼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로서 매뉴얼은 무엇인지 의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정책 제안할 때 이 의제 발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속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도 없죠.
>
> (박여성)
>
> 이걸 한다고 해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같은 작은 단체에서 여기 새마을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되니까, 이런 시도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죠. 60대도 젊어요. 저도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가 가장 큰 걱정이예요
>
> (이바름)

그 교육의 원류는 무엇인가 하고 보았을 때 대부분의 지금 나오고 있는 교육들이 어떤 특별한 툴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육들이 많았었어요. 그 틀의 핵심이 일본 마츠리에서 가지고 오거나 서양 미국사에서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틀을 우리 식으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결합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툴을 가지고 교육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맞지 않아요.

(복기쁨)

가장 저희가 민주시민교육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강사 인프라예요. 추천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안에서 검증 해 본 결과가 없다보니까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만족도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늘 고민하고 또 어려운거죠

(박여성)

2-5. 중재적 조건 : 민주주의에 관한 지역 시민의 역량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혹은 맥락적 조건에서 중심현상의 강도와 양상을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인 민주주의 학습 요구 출현',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성장'이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1. 자발적인 민주주의 학습 요구 출현

연구참여자들은 관련 활동을 통해 충남도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성 혹은 사회적 의제를 학습하는 사례를 발굴했다고 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모임을 구성하고 때로는 학습 기회를 요구하는 모습은 그들 스스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게 했다. 또한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발견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라 생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으나 학습자의 개인적 관심사에서 출발한 학습 활동이 민주주의 학습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고, 주요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한 시민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기도 했다.

숨어있는 모임들, 숨어있는 학습모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산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모임도 있고,,, 주제가 다양하고 다양한 모임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김공익)

그 강좌를 들은 분 중에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5, 6명 채 되지 않았죠. 그렇게 양성된 분들이 센터 강좌에 강사로 뛰게 되었죠. 만 4년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어요. 관련된 책을 읽고 계속 피드백하고.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짜서 그걸 가지고 수업 들어가고 후배 양성하고. 항아리 활동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매년 보수교육 차원에서 그 해에는 비폭력대화하고. 그 다음에 OOO에서 이번에는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다 들어주셨던거죠

(조선한)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의 수준을 지역에서 듣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 촛불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생각하고 집에서 시민으로 머물러 있다가 한 번 경험을 해보니 이런 경험을 의상의 다양한 이슈,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전문가가 와서 얘기해준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인권)

이 분들이 나름 자기 역할을 하는 느슨한 조직이 있어요. 제 3지대. 그런 여러 조직들이 동아리도 있고. 조금 더 발달되어 있으면 단체도 있고. 임의 단체도 있고. 친목 모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모임들이 다양한 구도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최근 늘어 나는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함께 교육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같은 가치를 공부하고 모여지는 모임들 같은 것

(복기쁨)

2-5-2.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성장

자발적 학습 요구가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편 여러 형태의 소통 경로의 출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참여 활동을 도모하고 조직화를 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수적 지역 풍토가 시민의 활동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해야 돼 하면 투표 잘 해야 돼 이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무슨 갈등중재자 과정수도 없는 과정들이 생겨나고 평생교육 강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카페도 늘어났고, 중간지원기관도.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양성이 되고 경험을 쌓고 있어요. 마을 현장에서도 최소한 다시금 회의가 일어나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트 같은 곳에 공용공간이 생겨난다는 것. 이게 핵심인데. 예를 들면 아산 같은데서 전에 코로나 온다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했잖아요.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는데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산에서. 프레임을 뒤집어엎고 그 반전을 만들어낸 그 집단이? 그들이 시민사회가 못한 일을 했거든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같이 해서 전달하고. 그러니깐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포지티브 운동을 통해서 양화시킨 것이죠. 굉장히 양화 시킨 거죠. 그러면서 판도를 뒤집었죠. 정부가 못한 일을 했어요

(복기쁨)

학습 모임도. 학습 모임은 라돈침대같은 경우가 엄마들이 스스로 대응을 해야 하니 모르니깐 공부를 엄청 했어요. 엄마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체에 들어가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참여연대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거죠. 여성 모임은 어울림인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환경문제가, 엄마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라돈 문제인가 그래요

(차연대)

공주에서 지역 특색을 담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아졌고...이제 저희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를 탈퇴하고 만든 것이 공주 책 읽는 시민행동이였어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촛불집회나 매주 참여하고 서울도 가고 이러면서 공주 책 읽는 시민행동이라고 정체성을 정립한 것이 어린이 책을 읽어도 올바른 작가를 모셔서 세미나를 하는 활동 하면서 어린이 책에 너무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시민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담은 것이 어린이 공주 책 읽는 시민 행동이고

(이공책)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어떤 동기에서든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개인과 조직으로 지역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나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상황과 조건에서 각자 경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구상할 때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2-6. 작용/상호작용 전략 :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대응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적, 의도적 전략들로서 과정적, 발전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을 사용하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으므로, 목적적, 목표 지향적이다(Strauss & Corbin, 1998). 민주시민교육이 직면한 상황은 경직된 교육 틀과 주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주의 학습 의지와 생활에서 습득한 민주적 의식과 사회참여 의지로 인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유연한 대처', '시민 학습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함', '시민 주도의 학습 기회 지원', '현실과 연결고리 만들기'이라는 대응을 전략적으로 시도하도록 했다.

2-6-1. 유연한 대처

무엇보다 관계자들은 충돌을 일으키거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상황을 비켜 가거나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내용적으로는 원하는 바를 고수했지만 '민주'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포장을 해서 혹은 그런 주제로 좀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평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평화라는 것들을 얘기 해 보자 하면서
>
> (박청년)

> 계속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할거예요.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해주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 말고요. 평화지킴이 이런 식의 순화된 언어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는 생각해볼 수 있는 꺼리들을 주려고 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가능하다면 성인 대상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
> (조선한)

> 자수에 대한 이론강의로 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환경교육과 리폼 교육을 같이 가라. 그래서 자수만 배울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같이 들어가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이 잠깐 이거 배우는 동안에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심리상담사도 마찬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러 왔으나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이웃을 위해 생각할 수 있게, 방과 후 지도사도 지역 마을 교육, 아이들을 위해 생각할 수 있게끔 타이틀과 강사 협의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요
>
> (신평생)

2-6-2. 시민 학습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함

학습자의 경험을 인지적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장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학습자 참여를 이끄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개인의 취미 교양으로 끝날 수 있는 교육에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성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었거든요. 완주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먹였어요. 간식을 잘 먹였어. 다른 거 줄이고 간식을 동반했어요. 수업을 다 하고 나면 한쪽에서 이 아이들하고 피드백하는거죠. 너무 재밌는게 담당자들이 배달도 하시고 직접. 그럼 담당자들 쳐다보는게 아니야. 손에 뭐가 있나.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아이들의 변화. 저희들을 만나면 와이틴(Y-Teen)활동 하겠다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
> (박여성)
>
> 나는 내가 동아리 회원이고 당연히 참석해야 하나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존중받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참고 갈게요 하는 게 아니 제가 이번 주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조금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
> (추평생)

박여성이 경험한 상황과 연결지어 시민들의 학습 요구를 존중하는 것 역시 관계자들의 주요한 실천 전략이 되었다. 개인의 내용적 관심사이든, 참여와 불참의 의지든 학습자의 현재 상황과 바라는 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과 연결되었다. 학습자 개인은 자신의 일 혹은 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결핍에 의해서 지쳐갈 때 소통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그래서 자기를 찾고 찾은 자기 속에서 남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연결 짓고, 그 영역을 통해서 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복기쁨)

삶의 평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로 잡아내려고 했던 것도 그 고민도 사실 민주시민교육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려워하는 주제보다는 생활 현장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문제의식이 뭘까 고민해보고 다가가려고 했는데

(박청년)

마을 안에서는 이미 모든 현장이 모든 필요가 민주시민교육과 결합되는 프로젝트 학습 현장이라고 봐요. 모든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자기 혼자 내 땅을 되찾겠어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민주시민교육과 결합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든 간에 마을 안에서 이슈가 생긴다는 것은 곧 그 이슈는 민주시민교육의 단일 프로젝트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복기쁨)

2-6-3. 시민 주도의 학습 기회 제공

민주시민교육의 참여 기회 확대는 소액의 학습모임을 지원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방법 모두 학습자가 교육에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 자체로 민주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학습계획과 운영을 학습자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며 이 계기가 이후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후자의 경우 학습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 참여의 계기를 스스로 구상해 본다는 점에서 참여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도이기도 하다.

(학습모임 지원) 강좌다 보니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천안·아산 시민사회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해보는. 그런 계기들, 첫 활동의 계기를 만드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공익).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반드시 이 교육에 넣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희가 인권 고개 넘기하고 캠페인 의도적으로 배치한 건데, 학생들하고 교육을 할 때, 제가 노동인권교육을 하러 가게 되면 큰 제목으로는 노동인권교육이지만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도 보니까...학생들은 이런 포스트잇을 붙였다더라.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럼 우리도 포스트잇을 적어볼까? 적은 것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진을 찍고 그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그것은 교육에서 끝난게 아닌 거예요.

(이인권)

2-6-4. 현실과 연결고리 만들기

진행하는 교육이 현실과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연계 작업은 교육 내용 안에서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학습 활동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 고민들은 계속했던 것 같고, 그게 구체적인 동아리 같은 경우도 생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아리가 있는데 배우고 한 것을 가지고 강사님하고 얘기해서 오늘 한 번 이주여성들,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해보게 하고 그런 안에서 엄마들이나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듣게 되는 것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박청년)

그게 좀 아쉬워서. 저희들도 그런데서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공주에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페미니즘 동네 책방 만들기 사업을 여성정책개발원 사업으로 짜서 진행을 했어요.

(이공책)

따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게 존재하는게 아니라, 저희 활동이 퍼실리테이션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그 가운데 민주주의를 경험하는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교육 프로그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교육 들으러 와라? 어렵죠. 저희 단체에서 사업할 때 의사결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하죠

(이마을)

2-7. 결과 :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의 바람

결과는 어떤 현상을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충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어떠한 바람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 결과 또는 성과로서 반드시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주체들의 연대', '제도화에 대한 기대', '활동가 역량 갖기'로 나타났다.

2-7-1. 주체들의 연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맥락적, 중재적 조건의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주체와 연대하거나 다양한 사업과 연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자원이 부족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성 학습과 실천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평생교육, 개별 사업 내 프로그램 수준으로만 진행되는 각종 시민참여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 속에서 부족함을 채우거나 활동의 확장을 위해 다른 단체 혹은 관련 사업과 연계하기도 했다.

전라도에 지리산 여성회라고 굉장히 멋지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예전에 저희도 여성 활동가 워크숍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OOO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 하는 것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같은 생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연계한 사업을 작년까지 몇 번 했거든요. 이번엔 저희가 가겠다

(이공책)

이제는 우리보다 한발 더 열려진 예를 들면 여친도시 시민참여단 분들이 처음으로 여성이 이러네? 이런 색다른 경험을 했던 저희가 요소요소 들어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어야겠다

(이공책)

중앙 쪽에서 이런 사람들의 엮어내고 지지해주고 함께 힘낼 수 있는 연대나 문화들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힘을 받아서 그 현장에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조선한)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디라도 연대성을 꾸려가야죠. 사실은 저희는 여협에 안들어가있어요. 목적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기초 단체에 대한 기반은 걱정을 많이 하는게 여협이라서. 저희하고는 많이 안 마주치고 그러다 보니깐 연대와의 거리를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박여성)

2-7-2. 제도화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어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인식이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제도화는 공적 테두리 안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앞서 설명한 연대의 장(場)도 제도화를 통한 자원의 공유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 했다.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교육공간이 열린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그러면 아무래도 한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어떨까. 진흥원 내의 한 파트로 진행이 되지만 민주교육센터가 생기면 공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강사로 가도 되고 프로그램 협의해도 되고 고육책도 다 있고 그러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그만 단체가 해내려니 어려운데.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하는 교육 중에 민주시민교육을 넣는다던지. 공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인권)

공적 체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인과적 조건으로 제시한 시민사회 단체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시민성 논의가 다양해지는데 있다. 권력 감시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본다면, 공적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한다면 견제의 기능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생활 의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참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적 지원은 당연한 부분인 것이다.

공적 체제 안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미 한 단계는 지나갔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다양한 소수자들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는 조금 더 질적인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과 폭을 넓혀주고 관계망을 만들어 주는 게 민주시민교육이 해줘야 할 부분이고, 추진하는 것은 민간에게 시민단체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인권)

2-7-3. 활동가 역량 구축

이러한 노력과 바람의 궁극적 결과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선다는 바람을 담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로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자로서 포지셔닝 해야 한다는 자기 과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 조직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만족이나 가치 추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대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불편한 점이나 나아지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죠. 그런 건 가능할까? 이게 가까워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가까워지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거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알게 되고 그 무대에 서게 되고 이게 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신평생)

여러 명의 강사들이 들어오다 보니 디렉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만의 그런 걸 하라고. 사업에는 지속가능한 뒤에 뭐가 있는데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분들끼리 모여질 때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찾아다니죠.

(복기쁨)

다양하게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는 활동을 했으면 하죠. 활동가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활동 내용의 질적인 확대라던지 이런 것들이 다 역량이지 않겠어요? 네트워크 하는 역량도 있어야 하고. 역량이 똑똑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와 실무도 중요하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해하면서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물론 내용적으로도요

(김공익)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이라 할 때 내용과 교수자로서 역할 신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력자, 네트워커, 사회혁신가, 실무자 등의 다양한 역량을 요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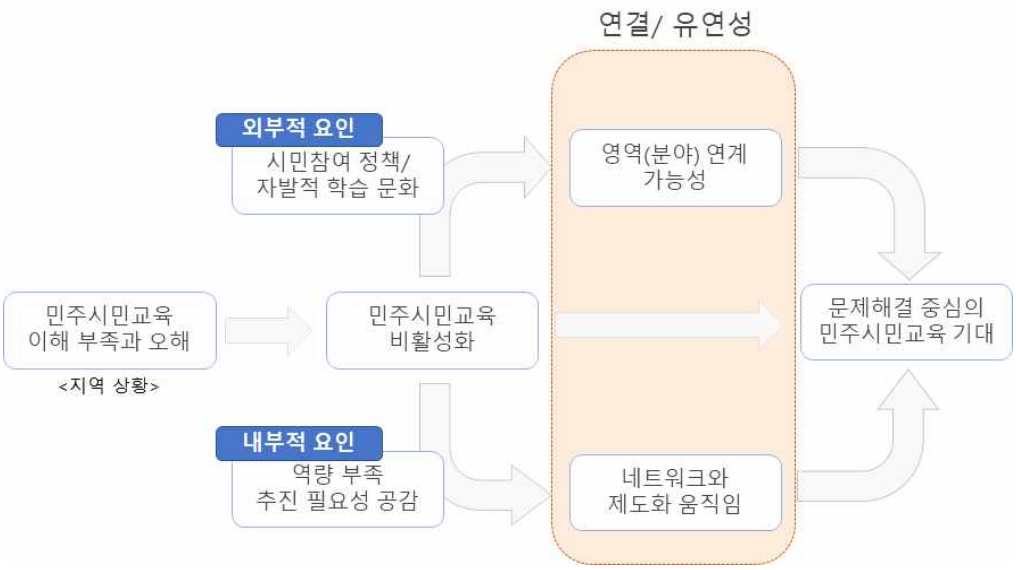
3. 충남 민주시민교육 참여 경험의 핵심 범주

선택코딩은 연구결과 분석의 최종단계로 들어간 범주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정교화하여 이야기 윤곽을 만들고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 진술을 통해 이론을 정교화하고 유형을 분석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포화상태는 질적 연구에서 자료수집을 끝내는 시기로 '더 이상의 관찰, 면접, 또는 문서고찰이 불필요한 것을 반복한다는 느낌을 주며 새로운 정보를 더 이상 주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일부연구에서는 범주가 포화되고 이론을 상술할 수 있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유근준, 2008).

3-1.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범주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료를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시민교육 참여의 경험의 핵심범주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실천 지향"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충남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을 하면서 활동가이자 학습자로 활동하는 존재, 그리고 학습자로 참여하였으나 활동가의 입장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대부분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현장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와 시민들이 이미 각자의 생활과 학습을 통해 체득한 시민성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활동 체계 안에서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여건도 되지 않았고, 도움을 받거나 지지해 줄 제도와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그럼에도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하고 있었다. 이때 문제란 '사회적 의제', '개인 생활과 연관된 의제' 등으로 나타났으나 무엇을 문제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문제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으나,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활동 체계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학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학습 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한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성 향상 경험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처럼 충남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민주시민교육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실천 지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현황 인식과 요구

참여연구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는 첫째, 유연한 방법 채택, 둘째, 다른 영역과 접목, 셋째, 주체 형성(단체와 개인 내부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넷째, 민주적 일상 만들기(일상의 변화)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 학습자가 어떠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들의 생활과 삶의 여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연구 참여자 및 활동 단체나 집단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가 민주시민교육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정적 정서는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의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개념에 대한 왜곡된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며,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써 줄 실천가도 부족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일상 문제의 해결이나 변화를 위한 시도로 실천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지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충남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자리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한 것이다.

3-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운영 주체

이 연구의 설계 초기에 광역 단위의 충남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지역뿐 아니라 활동하는 영역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택할 때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설계의 특성상 충남의 네 개 권역별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 맥락이나 연구 참여자의 활동 영역이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지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참여한 프로그램 혹은 활동하는 기관·단체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실무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의회나 주무 부서의 입장과 반응에 따라 활동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근거이론 분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경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교육영역에서 연구 참여자가 의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원으로 운영된다 해도,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관·단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사업내용과 결과에 있어 어려움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자 모집, 단체 내부의 역량 부족 등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려움 정도를 밝히는 정도였다.

도시부에 해당하는 충남 북부권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농어촌 혹은 도농복합지역인 서해안권과 금강권의 시민사회활동은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9]. 중간지원조직 차원에서 충남도 전체를 아울러 사업을 펼치는 곳은 활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나 사업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할 수 있으나, 시·군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거나 독립된 법인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았다 해도 신생 조직이 많아 활동이 미미한 편이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사업과 관련 중간지원조직, 평생교육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정부의 영향력과 권위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위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며,

9) 2017년 충남 공익활동단체 총람에 따르면 북부권에 해당하는 천안에 소재한 단체가 전체의 25.1%가, 다음으로 당진 9.8%, 아산 9.0% 순이었다(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17)

지역적 차이가 뚜렷하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충남의 북부권을 제외하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 중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북부권역 연구참여자였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몰이해의 경험은 권역과 무관했다.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V. 정책 제언

Ⅴ. 정책 제언

지금까지 앞 장들에서 충남에서 진행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관련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특히 활동가들의 요구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 담당 지원 조직 구축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현재 충남의 상황 그리고 개별 연구참여자의 상황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역 道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역별 조직도 필요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네트워크와 촉진의 역할을 해내는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단체와 단체, 단체와 지방 정부, 개인과 단체 등 다자간의 역할 중재를 해내는 메타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구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충남에서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주민자치, 공익활동,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단체는 영역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정의하자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희망제작소, 2016). 즉, 네트워크와 매개자의 역할이 중간지원조직의 가장 핵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즉, 소통의 창구, 만남의 매개, 협의와 조정의 기능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욕구 이해를 바탕으로 자원 조사를 통해 무엇으로 개별 관계의 노드(node)를 만들고 상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조사된 것처럼 중간지원조직은 직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보다는 개별 주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모임 단위의 자발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지역에 민주시민교육 주체를 키우는 것을 큰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지향과 목표를 가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각 주체의 경쟁 구도나 프로그램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업 계획이나 프로그램 기획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지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의 방향성을 찾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메타적 지원 기관으로 직접 추진해야 할 역할도 있다. 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가 첫 번째이다. 이 연구 역시 동일한 목적이나,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 기관·단체의 현황이나 프로그램 운영 실태, 광역 단위의 제도화 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개별 민주시민교육 주체의 학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개별 기관·단체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도 그러하지만 상호 학습을 통해 경험을 나누는 등 집단역할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영역 확장

민주주의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형태이며 원리이다. 국가와 중앙정부의 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마을살이 그리고 개인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즉,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민주주의가 흐르도록 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학습은 이 모든 장면에 함께 해야 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민주시민교육이 동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과 생활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협치, 참여예산,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진행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 영역 역시 지역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 만약에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가 같이 묶여야 되면 이것을 하나의 트랙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갔거든요. 주민자치교육이 따로 가고 주민참여예산교육이 따로 가고 민주시민교육이 또 따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대상은 비슷해요. 그러다보니 교육 내용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게 작년과 재작년에 OO군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었어요.

민주주의와 관련된 의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환경이나 통일과 같은 중요한 의제는 세계적·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며 관련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가 충남 도민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 단위의 논의뿐 아니라 우리 지역이 관련 정책과 민주시민교육 영역 안에서 이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정책과 의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융복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특정 내용 틀에 넣고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이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 여러 경로의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과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고안해야 하는데, 이는 여러 주제를 담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의 의제를 만드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제안한 중간지원조직 제안과도 연결되는데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간의 연계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한다.

3. 실무력과 전수능력을 구비한 활동가이자 교육자인 주체 양성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해낼 주체를 키우는 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학문과 실천을 교육으로 풀어내어 시민 학습자의 시민성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교육학에서는 실천 주체를 교수자-학생(학습자)로 두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자 양성에 힘을 쓰는 것과 달리 민주시민교육에서 시민 학습자를 지원하는 존재는 교수자 이상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공교육은 학교가, 평생교육은 지역의 평생학습관이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부재하고 주체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학술적·실천적 논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민주시민교육의 주체 양성을 강조했으며 앞서 제안한 중간지원조직과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교육 영역과 구분되는 점은 활동가의 역할을 특히 교수자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실천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주체 양성은 중간지원조직 논의와 연결지어 단위 지역별 활동 조직, 실무력을 갖춘 활동가, 내용 전문성과 교수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道 단위의 활동 조직 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곳에서 이 활동을 해낼 주체를 키우는 것은 센터를 설립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道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충남 내 시·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컨설팅 연구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활동가와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로 홍윤기 외(2015)는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을 시민교육론, 시민정치론, 시민실천론으로 구성하여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제안의 경우 주로 이론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정치 현안에 대한 쟁점 탐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력의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주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다. 이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혹은 담당자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와 주체별 역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평생교육과 관련한 조사 및 분석, 기획 및 계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교수 및 학습, 변화 촉진, 상담 및 컨설팅, 평가 및 보고로 제안하고 있다(김진화·김한별·김만희, 2007). 그러나 이러한 직무 중 공공 평생교육 전달체계 안에서 평생교육사에게는 교수·학습의 역할을 제외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교수자의 역할은 전문적 교수자에게 부여하되, 교수·학습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평생교육사가 담당한다. 민주시민교육에서 활동가의 역할은 어디로 볼 것인가도 제도화의 시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 내에서 활동가의 역할을 교수자로 한정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

이 연구가 진행되는 전반에서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통 경험이 부재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민주시민교육'을 보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홍보 혹은 교육으로 이해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충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통 과제이겠지만 충남도 역시 그 정도가 강하다.

70년 분단국가 상황으로 인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대립 등의 사회적 갈등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토론하고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립 상황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2019년부터 10개 광역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자유총연맹 5개 주체가 주축이 되어 전국 단위의 기획을 지역에서도 진행하였다. 충남 지역도 2019년에는 간담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공론화 회의를 위한 촉진자 양성과정,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가 만나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여러 상황으로 상시적 협의나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시민사회가 탄탄하지 못한 충남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관계 맺기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독일은 분단국가 상황에서 좌우 진영의 정치학자들이 모여 학술대회를 진행하였고, 좌우 정치교육에 대한 이념 논쟁을 겪으면서 발생한 심각한 사회혼란에 대해 좌우 진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치교육 원칙을 토론하고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세 원칙을 합의했다. 이후 독일은 이 합의에 따라 교육 현장에 심각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체계적 정치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통일 이후에도 이 합의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체계적 민주주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심성보 외, 2018).

우리사회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의 배경에도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유효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독일과 같은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원칙을 도출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다양한 주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방법, 원리 등 민주시민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충남의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통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별적 학습 과정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가치, 구체적 사업 등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학습과 합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합의가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것을 확대하여, 관련 학계의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주체에도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년째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전국의 대부분의 광역지역에서 제정된 조례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남 도민으로서만이 아니라 한국민으로서의 진정한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권진욱(2018). “민주시민교육의 최근 흐름과 발전 방향”, 『Issue & Review on Democracy』.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진화·김한별·김만희(2017). “평생교육사 직무분석과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성희(2004). 『질적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 원미사.

박재창 외(2007).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대전: 오름

신두철·허영식(2008). 『민주시민교육의 정석』, 대전: 오름

유근준(2008). “대상관계의 변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다현(2018), “비판적 사고 촉진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법적 원리 탐색”,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서울특별시(2014).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선거연수원(2014). <각 국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선거연수원.

심성보·이동기·장은주·케르스틴 폴(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송두범·강수현(2017).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이슈페이퍼.

송두범(2018).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이슈리포트), 충남연구원.

안외순(2019), “동학농민혁명과 전쟁 사이: 집강소(執綱所)의 관민 협치”, 『동학학보』 51. 동학학회.

양병찬 외(2019). <충청남도 평생교육중장기계획(2019-2023)>.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장은주, 조철민, 이다현 외(2020). 『우리는 시민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피어나

정원규·김원석·옹진환·정하윤(2019). “민주시민교육실태조사 연구: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규태(2017), “한국 근대 정치·사회단체의 ‘국민’ 만들기: 독립협회·대한자강회·대한협회·신간회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제39집, 숭실대학교.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2017). <충청남도공익단체총람>.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남도 교육청(20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홍윤기(2015). <서울 민주시민교육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서>. 서울시.

희망제작소(2016).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희망이슈 5호. 희망제작소.

Held, D., (1987).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박찬표 역(2010),『민주주의의 모델들』, 서울: 후마니타스.

Held, D., (1991)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안외순 역(1996), 『정치이론과 현대국가: 국가/권력/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서울: 학문과사상사.

Glaser,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Sociology Press, Mill Valley.

Lincoln, Y. & Guba, E(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Strauss, A. & Corbin, J(1998).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2001, 서울 : 현문사.

남인순 의원 2020년 6월 발의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 의원 2020년 11월 발의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발 행 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연 락 처	031-361-9500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발 행 인	지 선
발 행 일	2020년 12월 24일
기 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제 작	㈜폴인사이트
I S B N	ISBN 979-11-87593-70-6

연구책임자	**안외순** | 한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박성호** | 충남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서봉균 |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다현 | 공주대학교 지역교육정책개발원 연구교수

연구수행기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